2027학년도 서강대학교 수시 논술 대비

논술 예상 문항 문제지

(인문계열) [세트 1]

수험번호		성 명	

【 수험생 유의사항 】

1.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재고 푸십시오.
2. 문제지는 총 4 쪽(표지 제외)이며, 문항과 배점 비율·분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1 (40%, 800~1,000자) 문제 2 (60%, 800~1,000자)
3.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제 원고지에 작성합니다.
4. 글자 수는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셉니다.
5.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십시오.
6. 이 문제지는 서강대학교 2027학년도 논술 모집요강(2문항)과 2026학년도 기출·2027학년도 모의논술의 출제 형식을 바탕으로 포도논술이 만든 예상 문항입니다. 서강대학교가 출제하거나 공개한 문항이 아닙니다.
7. 작성한 답안을 포도논술(podotools.net/essay)에 입력하면 두 문제를 한 번에 채점·첨삭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40%, 800~1,000자)

제시문 [가]의 'P'가 당면한 문제를 [나]~[라]를 참고하여 설명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를 활용하여 논술하시오. [40%, 800~1,000자]

[가]

〈앞부분 줄거리〉 1930년대 서울. 동경에서 공부하였고 한때 잡지사에도 다녔던 지식 청년 P는 지금은 직업 없이 사글세 행랑방에서 지내며 일자리를 구하러 다닌다. 그는 선배인 신문사 K사장을 찾아가 일자리를 부탁하지만, 빈자리가 없고 결원이 나도 후보자가 몇십 명씩 밀려 있다는 대답을 듣는다.

"거 참 큰일들 났어."

K사장은 P가 낙심해하는 것을 보고 별로 밑천이 들지 아니하는 일이라서 알뜰히 걱정을 나누어 준다.

"저렇게 좋은 청년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저렇게들 애를 쓰니."

P는 속으로 코똥을 '흥' 하고 뀌었으나 아무 대답도 아니하였다. K사장은 P가 이미 더 조르지 아니하리라고 안심한지라 먼저 하품 섞어 '빈자리가 있어야지' 하던 시원찮은 태도는 버리고 그가 늘 흉중에 묻어 두었다가 청년들에게 한바탕씩 해 들려주는 훈화를 꺼낸다.

"그렇지만 내가 늘 말하는 것인데…… 저렇게 취직만 하려고 애를 쓸 게 아니야. 도회지에서 월급생활을 하려고 할 것만이 아니라 농촌으로 돌아가서……."

"농촌으로 돌아가서 무얼 합니까?"

P는 말 중동을 갈라 불쑥 반문하였다. 그는 기왕 취직 운동은 글러진 것이니 속 시원하게 시비라도 해 보고 싶은 것이다.

"허! 저게 다 모르는 소리야…… 조선은 농업국이요, 농민이 전 인구의 팔 할이나 되니까 조선 문제는 즉 농촌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 지금 농촌에서 할 일이 오죽이나 많다구?"

"저는 그 말씀 잘 못 알어듣겠는데요. 저희 같은 사람이 농촌에 가서 할 일이 있을 것 같잖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가령 응…… 저……."

K사장은 응…… 저…… 하고 더듬으면서 끝내 대답을 하지 못한다. 그것은 무리가 아니다.

그가 구직하러 오는 지식 청년들에게 농촌으로 돌아가 농촌 사업을 하라는 것과 (다음에 또 꺼내는 일거리를 만들라는 것은) 결코 현실에서 출발한 이론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었었다. 그저 지식 계급의 구직꾼이 넘치는 것을 보고 막연히 '농촌으로 돌아가라' '일을 만들어라'고 해 왔을 따름이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 플랜이 있는 것도 아니었었던 것이다.

(중략)

인텔리…… 인텔리 중에도 아무런 손끝의 기술이 없이 대학이나 전문학교의 졸업 증서 한 장을, 또는 그 조그마한 보통 상식을 가진 직업 없는 인텔리…… 해마다 천여 명씩 늘어 가는 인텔리…… 뱀을 본 것은 이들 인텔리다.

부르주아지의 모든 기관이 포화 상태가 되어 더 수요가 아니 되니 그들은 결국 꼬임을 받아 나무에 올라갔다가 흔들리는 셈이다. 개밥의 도토리다.

(중략)

〈중간 줄거리〉 시골 형에게 맡겨 둔 아홉 살 아들 창선은 학비를 대지 못해 보통학교를 그만두었고, 형은 아이를 데려가 공부를 시키라며 서울로 올려 보내겠다고 알려 온다. P는 인쇄소의 문선 과장 A를 찾아가, 월급은 없어도 좋으니 아이에게 일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다.

"그럼 왜 공부를 시키잖구?"

"인쇄소 일 배우는 것도 공부지."

"그건 그렇지만 학교에 보내야지."

"학교에 보낼 처지도 못 되고 또 보낸댔자 사람 구실도 못 할 테니까……."

"거 참 모를 일이오…… 우리 같은 놈은 이 짓을 해 가면서도 자식을 공부시키느라고 애를 쓰는데 되려 공부시킬 줄 아는 양반이 보통학교도 아니 마친 자제를 공장엘 보내요?"

"내가 학교 공부를 해 본 나머지 그게 못쓰겠으니까 자식은 딴 공부를 시키겠다는 것이지요."

"글쎄 정 그러시다면 내가 내 자식 진배없이 잘 데리고 있으면서 일이나 착실히 가르쳐 드리리다마는…… 원 너무 어린데 애차랍잖애요?"

"애차라운 거야 애비 된 내가 더하지요만 그것이 제게는 약이니까……."

(중략)

이튿날 아침 일찍 창선이를 데리고 ××인쇄소에 가서 A에게 맡기고 안 내키는 발길을 돌이켜 나오는 P는 혼자 중얼거렸다.

"레디메이드 인생이 비로소 겨우 임자를 만나 팔리었구나."

— 채만식, 「레디메이드 인생」

[나] 실업은 그 원인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마찰적 실업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경기적 실업은 경기가 침체하여 노동 수요가 줄어들 때 발생한다. 이와 달리 구조적 실업은 산업 구조나 기술이 변하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능력과 구직자가 가진 능력이 서로 맞지 않아 발생한다. 이때 구직자는 다른 분야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새로 익혀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경기가 회복되어도 실업이 쉽게 줄지 않으며, 일자리를 찾는 기간이 길어지면 구직자의 기술과 의욕이 떨어져 다시 일자리를 얻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다] 학력주의는 개인의 실제 능력이나 성과보다 학력을 기준으로 사회적 지위와 보상을 나누는 경향을 말한다. 학력이 높을수록 더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퍼지면 사람들은 상급 학교 진학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다. 학력이 개인의 능력을 보여 주는 신호로 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학력을 갖추려는 경쟁도 이어진다. 한 사람의 처지에서 보면 이는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러나 고학력자가 늘어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 학력은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경쟁에 참여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되어 버린다. 이를 학력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이때 많은 사람이 기대보다 낮은 일자리를 받아들이거나 취업을 미루게 되며, 교육에 들인 사회 전체의 자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라] 직업은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통로이다. 그런데 사회에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의식이 남아 있으면 사람들은 사무직이나 전문직처럼 높이 평가받는 직업에만 몰리고, 손기술이나 육체노동이 필요한 직업은 피하게 된다. 그 결과 어떤 분야에서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넘치는데 다른 분야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특정 직업을 낮추어 보는 시선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선택을 좁히기도 한다.

[마] ○○ 취업 지원 제도는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과 저소득 구직자에게 단계별로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1단계에서는 상담사가 구직자의 경력과 적성, 생활 형편을 함께 살펴 개인별 취업 계획을 세운다. 2단계에서는 계획에 따라 직업 훈련이나 일 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데, 훈련 과정은 지역 산업과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된다. 3단계에서는 구직자를 구인 기업과 연결해 주고, 취업한 뒤에도 일정 기간 적응 상황을 살핀다. 구직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일정 기간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여 생계 때문에 훈련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다.

[문제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60%, 800~1,000자)

제시문 [가]의 두 지문에 입각하여 [나], [다]의 갈등을 논하고 [라], [마]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의 대안적 방향을 논술하시오. [60%, 800~1,000자]

[가-1]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산권 등 다양한 기본권을 보장한다. 그러나 기본권이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권리 행사가 다른 사람의 권리나 공동체의 안전과 부딪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정책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제한의 목적이 정당한지, 수단이 목적 달성에 적절한지, 덜 침해적인 다른 방법은 없는지를 하나하나 따져야 하며, 제한의 정도와 그로써 달성되는 공익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이 있어야 한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가-2] 자유주의는 개인을 자기 삶의 목적을 스스로 선택하는 독립적 존재로 보고, 국가는 특정한 좋은 삶의 모습을 강요하지 말고 개인의 선택을 보호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해 공동체주의는 개인이 가족, 지역, 국가와 같은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 그 역사와 전통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개인은 공동체와 분리된 채 권리만을 주장하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선을 함께 추구할 책임을 지닌 존재이다. 공동체주의자들은 개인의 권리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이기주의가 퍼지고 공동체의 유대가 약해진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공동체주의 역시 공동선을 앞세워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거나 공동체 바깥의 사람들을 배제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개인의 권리와 공동선이 조화를 이루는 길을 찾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여겨진다.

[나] 쓰레기 소각장, 하수 처리장, 화장장, 송전탑 같은 시설은 사회 전체에 꼭 필요하지만, 주변 주민들은 소음과 악취, 건강에 대한 불안, 재산 가치의 하락 등을 이유로 이러한 시설이 자기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곤 한다. 이를 지역 이기주의의 한 모습으로 보아 님비(NIMBY) 현상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를 단순한 이기주의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견해도 있다. 시설이 주는 혜택은 지역 전체가 고르게 누리는 반면, 그 부담은 시설 주변에 사는 소수의 주민에게 집중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시설은 땅값이 싸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작은 지역에 거듭 들어서는 경우가 많아 특정 지역에 부담이 쌓인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그래서 시설의 필요에는 동의하면서도 입지를 두고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되풀이된다. 아래 사례의 예정지 주변은 대기 측정치가 환경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시설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루어진 적이 없다.

광역 자원 회수 시설 입지를 둘러싼 입장 대립

지방 자치 단체 C: 시설이 들어서지 않으면 수십만 시민이 내놓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법이 정한 절차와 환경 기준을 모두 지켰습니다.

주민 대표 D: 우리 동네에는 이미 하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결정이 다 내려진 뒤에야 통보를 받았는데, 왜 또 우리만 희생해야 합니까?

[다] 감염병이 유행할 때 방역 당국은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방문 장소 등을 공개하기도 한다. 접촉했을 수 있는 사람이 스스로 검사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공개된 정보로 확진자의 신원이 추측되어 비난과 혐오가 쏟아지는 일이 있었다. 이에 접촉자를 찾는 데 꼭 필요한 장소와 시간만 공개하고 신원을 짐작하게 하는 정보는 빼야 하는지, 공개 기간은 얼마로 제한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공개가 지나치면 검사를 꺼리는 사람이 생겨 오히려 방역의 목적을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라] 공공 갈등은 어느 한쪽이 옳다고 판정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결정의 정당성은 결과만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는 절차에서도 나온다. 결정이 다수의 뜻에 따라 내려졌다는 것만으로 그 결정을 따르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 공정한 절차란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결정이 확정된 뒤가 아니라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판단의 근거가 모두에게 열려 있는 절차를 말한다. 또한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결정이라도 그 부담은 혜택을 누리는 정도와 책임에 비례하여 나누어져야 한다. 피할 수 없는 부담이 특정한 사람에게 돌아간다면 그 부담을 필요한 만큼으로 줄이고, 공동체가 그에 상응하는 몫을 되돌려 줄 때 비로소 그 결정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마] 민주 사회의 시민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그 해결에 참여하는 존재이다. 공화주의 전통에서는 이러한 태도를 시민적 덕성이라 부르며, 시민들이 공적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자유도 지켜질 수 있다고 본다. 오늘날에는 한 사람의 선택이 다른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겪는 어려움을 자신과 관계없는 일로 여기지 않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기 몫의 책임을 지려는 연대 의식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연대는 모두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것이지, 연대를 내세워 부담을 지는 소수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다수의 편의를 위해 소수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귀를 기울이는 존중의 자세 역시 연대의 일부이다.

〈끝〉